

# “농협 개혁, 조합원 의사 민주적 반영 방식으로”

### 민주 이원택 의원·농협조합장 정명희 등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통과’ 촉구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희(正名熙), 좋은농협 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정명희 조합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3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2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자 농협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 회원조합이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조합간 협동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 “코로나19 방역용품 낙찰률 편차 크다”

#### 행자위, 자치행정국 소관 행감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2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매년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완료’이거나 ‘추진 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의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의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시정을 당부했다.

김기재 부위원장(전주4)은 해마다 50명 정도의 5급 이상 간부를 도 산

하기 및 증양부처 등으로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한 뒤, “파견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했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자리로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시군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하면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전주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 등 시군 간 갈등조정 사례가 없음에 아쉬

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군간 갈등조정 역할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올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소독제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체와 수익원의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는데, 같은 날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35.8%, 97~98% 등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약 추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전북 체육계, 꼼꼼하고 완성도 있는 리더십 중요”

#### 문건위, 전북체육회 대상 행감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12일 전북도 체육회,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민 위원장(남원1)은 도내 체육 강사 및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체육회에서 법률 및 국제업무 전문 인력 등을 무리하게 채용할 것이 아니라, 체육 지도자들을 활용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스포츠를 통한 우수 꿈나무 발굴 육성 및 대학 및 실업팀 창단을 위해 현재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진정으로 전북 체육계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 세세한 사안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완성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이 현재 정원 대비 14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정원이 필수인력이라면 하루빨리 충원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정원에 대한 재대로된 검토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신임 체육회장 공약 중 하나인 체육 관련 지도자 및 행정실무자의 처우개선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며, “아무리 좋은 공약도 구체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빈 공약이 될 수 있으니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 확보 등에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공공구매

및 우선구매 제도 등에 대해 언급하며, “체육회 예산 중 공사 및 물품 구매 부분이 의무 공공 구매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집행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술인 특례보증 사업을 언급하며, “예술인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증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관광재단 최고 의결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연임 제한 규정도 없다”며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재단 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생생마을 연계 방안 모색 농촌체험관광 거점으로 거듭나야”

#### 농산경위,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감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2일 농축산식품국,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호운 의원(전주1)은 “농정거버넌스 삼각농정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농업인, 소비자 단체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사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생마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농촌체험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병행하며, 운영에 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현열 의원(부안)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북의 친환경 농산물 면적과 농가 수는 줄고 있는 실정을 질타하고, 단순 생산부문의 예산집중 보단 학교급식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비를 향상 등 소비와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예산지원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지역에서 농민공역수당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 내년에는 농가 경영체 정보를 사전에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농민수당과 새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금 영향으로 농가 쪼개기 현상이 극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부담 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전국 최초 ‘전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농촌유학 1번지를 선언하던 전북도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가능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농촌유학으로 낙제수준에 불과하다”며, 운영형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정리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 “강력한 확대예방 대책 시행을” “환경교육, 민주시민 육성 증가장 중요”

#### 환복위, 복지여성보건국 행감사

####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12일 복지여성보건국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구 등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확대예방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사후관리를 하도록 위탁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책임지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해 강력한 확대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도에서도 도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은 “군단위에서 의사부족현상이 심각해 의료취약지 점진적 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지방에서 사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2일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육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과 독서교육”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강조·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수(익산3) 의원은 심장제세동기 미비지와 관련해 “심장제세동기 설치 공·사립, 자립형, 전국 또는 도내 모집이든 도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통계는 도내 학생들로 이뤄진 통계지표가 나온다”면서 “심장제세동기는 도내 모든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공중보육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역별 긴밀한 협의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학생을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의 복지단체와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유망중기, 성장에 날개 달다

#### 전북도, 11개사에 인증서 수여

전북도가 전북발전을 이끌어갈 2020년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는 12일 전북도청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 11개사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정기업 대표 11명과 기업 관계자 등 20명 내외의 인원만 참석했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 측정 및 손소독

제 사용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선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소프트아쿠아(대표 장희정) ▲코엔에프 유한회사(대표 임종복) ▲(주)이삭떡장차(대표 배철환) ▲주식회사 우성이앤에스(대표 조이행) ▲현대농기계(대표 정다훈) ▲주식회사 대성메디칼(대표 양용호) ▲주식회사 세일특수강(대표 이상복) ▲주식회사 조은세상(대표 이대진) ▲주식회사 세립현미(대표 고종환,고대경) ▲삼동허브(주)(대표 신병일) ▲주식회사 산과 들(대표 김인식) 등 총 11개 기업이다.

이번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25개 기업이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층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 5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원(일반기업 3억원)까지 이차보전 3.0%(일반기업 2.0%)로 지원 받고,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 받는다.

송지현 도지사는 “도내 제조업체의 90%가 중소기업인만큼,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 속에서 찾은 기회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선원들의 인권·권리보장 문제 해소

#### 민주 이원택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박소유자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

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또한,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 나인권 도의원 “전북도

#### 귀농·귀촌 정책 홍보 강화”



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239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귀농·귀촌인은 2017년 2만2,187명, 2018년 2만1,058명, 2019년 1만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농산경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 및 갈등인식 설문조사 결과, 도내 귀농·귀촌인 50% 이상이 귀농·귀촌 정책을 잘 모르고 40%가 불만을 표하고 있어, 전북도 귀농·귀촌 정책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방안 논의

#### 민주 한병도 의원, 법률 제정 위한 토론회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의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발표했다.

또 윤중화 한국지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편차를 줄이고, 주민 등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적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